

---

# 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
---

2021. 1.



해양수산부





# 목 차



I. 4년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II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6
III. 2021년 해양수산부 핵심 추진과제 .....	8
1. 수출물류 지원, 차질없는 해운재건 .....	9
2. 수산·어촌 활력 회복, 연안경제권 균형발전 .....	12
3.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.....	15
4.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혁신산업 성장 .....	19
5.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 .....	22
IV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.....	25
[붙임] 4년간 성과/21년 계획 관련 체감사례 .....	26



# I. 4년 추진성과와 평가

## 1 해운재건의 가시적 성과 창출

### □ 추진실적

- ① (해운재건 계획) 한진해운 파산('17.2)으로 추락한 해운 재건을 위해 「5개년 계획」 수립('18.4), 한국해양진흥공사\* 설립('18.7)으로 총력 지원  
\* 선박금융(S&LB) 등의 방식으로 80개 해운기업의 자산 확보, 경영 안정 등에 5.2조원 지원
- ② (선복량 확충) 초대형 '컨'선 20척(2.4만TEU급 12척, 1.6만TEU급 8척) 등 총 187척의 신조 및 노후선박 대체 건조 발주('18~'20)
  - 알헤시라스호 등 2.4만TEU급 세계 최대 '컨'선 12척은 유럽항로에 조기 투입하여 24항차 연속 만선 출항('20.4~12)
- ③ (선사·항만 경쟁력 강화) HMM은 <sup>3대 해운동맹</sup> THE Alliance 가입 및 협력 개시('20.4~), 아시아 '컨'선사는 항로 구조조정 등\* 경쟁력 강화 지원  
\* 항로 구조조정('17~'18, 3회), 한국해운연합(KSP) 구성('18), 장금상선-흥아해운 통합법인 출범('19)
  - 우수 선화주 인증제\* 등 선사의 안정적 화물확보를 지원하고, 부산항·광양항 등 거점항만의 인프라 지속 확충 및 증장기 발전전략 마련\*\*  
\* 6개사 선정('20.11) → 세제 등 지원 / \*\*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('19),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('20)

### □ 정책효과

- ① (해운 매출액 등 회복) 해운재건 계획 실행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산업 경쟁력(매출액 등) 회복 및 해운-조선 상생 추진

< 구 분 >	한진사태 전	한진사태 후	'20년(추정)
해운 매출액(조원)	39조원('15)	29조원('16)	36조원
원양 선복량(TEU)	105만TEU('16.8)	46만TEU('16.12)	78만TEU
지배선대(DWT)	8,535만('16)	7,994만('17)	9,030만

- 대표 국적선사인 HMM 영업이익도 21분기 만에 흑자 전환('20.2분기)
- ② (수출입물류 지원)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('컨' 처리 기준 세계 6위\*)으로, 광양항은 세계 11위\*\*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  
\* '컨' 환적물량 1,164만TEU('19년, '컨' 처리물량의 53%) / \*\* 세계 11번째 年 물동량 3억톤 돌파('18년)
  - 해운재건 성과를 바탕으로, 중소·중견화주의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해 임시선박(9척) 투입, 정기운항선박 선적공간 등 지원('20.8~12)

## 2 수산업 혁신 및 연안·어촌 활력 제고

### □ 추진실적

- ① (수산업 혁신 계획) 생산·유통·가공·어촌 등 수산업 분야별 전주기 혁신을 위해 「수산업 혁신 2030 계획」\* 수립('19.2) 및 실행  
\*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, 친환경 양식 육성, 유통·가공 시스템 혁신,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
- ② (친환경 생산) 어선 감척(1,187척), <sup>총허용어획량</sup>TAC 확대(12→<sup>시범포함</sup>15종), 불법어업 단속, 「양식산업법」\* 제정('19), 안전성 조사 강화(6.3만건) 등 어업 친환경화  
\* 면허심사·평가제(어장환경관리 등) 도입, 양식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 등
- ③ (유통·가공 혁신) 유통혁신로드맵('18.6)·新수출전략('19.3) 수립 및 「수산물식품산업법」·「김산업법」 제정('20), 친환경 유통·가공시설\* 조성  
\* 유통시설 6개소(산지거점유통센터, 소비지물류센터 등), 가공시설 4개소(수산물식품거점단지) 조성
- ④ (어촌 정주여건 개선) 어촌뉴딜 300\* 신규 추진('18~), 농어업 세계 불균형 해소\*\*·수산공익직불제 도입('20) 등 생활SOC, 소득기반 확충  
\* 대상지 선정 : ('19) 70개소 → ('20) 120개소 → ('21) 60개소 → ('22) 50개소  
\*\* (종전) 어업·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 → (개선) 8천만원(어업 5천만원, 양식 3천만원)까지 비과세
- ⑤ (연안경제 활성화) 중장기 전략 및 제도 마련\*, 인프라 조성\*\* 등을 통해 항만 재개발 및 해양·어촌관광 활성화 추진  
\*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('20.12), 해양관광 활성화대책('19.5), 「항만재개발법」·「해양치유법」('20.1)  
\*\* 부산 북항, 인천 영종도 등 재개발, 해양레저관광거점(5개소)·치유센터(4)·어촌테마마을(7) 조성 등

### □ 정책효과

- ① (수산물 경쟁력 향상) 수산물 생산·유통·가공의 친환경·고부가 가치화, K-FISH 마케팅 지원으로 연간 23억불 이상 수출실적 달성\*  
\* 총 수출액/김 수출액(억불) : ('17) 23.3/5.1 → ('18) 23.8/5.3 → ('19) <sup>역대최고</sup>25.1/5.8 → ('20) 23.2/<sup>역대최고</sup>6.0
- ② (수산물 안전·중국어선 조업감축) 친환경·자원관리형 수산정책을 기반으로 WTO 對일본 수산물 분쟁 승소('19.4), 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\*  
\* 中어선 입어 : ('16) 1,600 → ('20) 1,400척 / 中어선 불법조업 : ('16) 405 → ('19) 195척
- ③ (연안·어촌 활력 제고)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, 노후 항만의 재개발, 해양·어촌관광 활성화\*로 연안·어촌 지역의 활력제고에 기여  
\* 연간 해양관광객수 : ('17) 11백만명 → ('18) 14백만명 → ('19) 18백만명

### 3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기틀 마련

#### □ 추진실적

- ① (선박·항만 친환경화) 「친환경선박법」(‘18.12)·「항만대기질법」(‘19.4) 제정, 2030 그린쉽-K 추진전략(‘20.12) 수립 등 선박·항만 친환경 전환\* 추진  
\*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(3.5→0.5%), 배출규제해역 지정, 선박·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등
- ② (해양플라스틱 저감) 종합대책 수립(‘19.5), 「해양폐기물법」 제정(‘19.12)\*, 친환경 부표 보급(477만개) 등 소주기(발생-수거-처리) 관리체계 마련  
\* (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) ‘18년 현존량(11.8만톤) 대비 ‘22년 30%, ‘30년 50% 저감 (해양폐기물관리법)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, 하천관리청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등
- ③ (해양공간 이용 합리화) 「해양공간계획법」 제정(‘18.4) 및 기본·관리계획 수립(‘19.7~), 해양환경·어업인-바다모래·해상풍력 간 상생방안\* 수립  
\* 골재수급 안정대책(해수부·국토부, ‘17.12), 해상풍력 상생·발전방안(해수부·산업부, ‘20.7)
- ④ (해양생태계 관리) 해양보호구역 확대(576→1,784km<sup>2</sup>), 「갯벌법」 제정(‘19.1) 및 갯벌 복원 추진, 해양생태축\* 구축방안 마련(‘20.8)  
\* 「해양생태계법」 개정(‘20.12)으로 해양생태축 설정·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

#### □ 정책효과

- ① (해양환경 녹색복원) 항만 미세먼지 저감\*,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\*\* 등을 통해 해양환경의 녹색복원 촉진  
\* 계절관리제(‘19.12~‘20.3) 기간 중 주요 항만도시의 전년대비 미세먼지 농도 변화( $\mu\text{g}/\text{m}^3$ ) : (부산) 28 → 21( $\Delta$ 28%), (인천) 32 → 24( $\Delta$ 25%), (울산) 25 → 19( $\Delta$ 24%)  
\*\* 해양쓰레기 수거량(만톤) : (‘16) 7.1 → (‘17) 8.2 → (‘18) 9.6 → (‘19) 10.9 → (‘20) 13.3(잠정)
- ② (해양공간의 상생·공존) 先계획-後이용 관리체계, 해양개발-보존 상생모델\* 등 해양공간의 상생·공존 및 갈등 관리체계 구축  
\* 남해 EEZ, 서해 EEZ 등 친환경적 바다모래 채취 재개,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
- ③ (해양생태계 보전)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복원 확대, 해양생태축 제도 도입으로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및 통합관리 기반 마련

## 4 해양안전 관리 선진화

### □ 추진실적

- ① (안전제도 강화)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정('19.8) 및 「낚시관리법」 개정('19~'20), 위험물선박 제도 개선('20.12) 등으로 선박사고 예방 강화
  - \* (어선) 기상특보시 출항제한·위치보고 강화, 기상악화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(낚시어선) 안전요원 승선(13인 이상, 야간항해), 선장자격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(위험물선박)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 대상 방폭장비 확대 등
- ② (안전조직·인력 보강)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'19.7, 선박안전공단 확대), 어선안전정책과('20.3) 등 안전관리조직 신설·강화
  -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자 증원(106→142명), 국민안전감독관 운영(年 15명)
- ③ (안전장비 보급·개발) 어선 화재사고 예방·저감을 위해 화재탐지 경보장치 1만 5천척에 보급('19~'20) 및 육상용 소화기 사용 허가('20.1)
  -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어선 위치확인시스템, 표준어선형 개발('20)
- ④ (안전문화 확산) 여름철 해양안전체험장 운영('18~'20, 워터파크 등), 해양안전체험관(안산) 및 국민해양안전관(진도) 건립 추진('18~)
- ⑤ (디지털 해양교통관리)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,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(S-100) 기반의 바다 내비게이션\*(e-Nav) 시스템을 세계 최초 구축('20)
  - \* 충돌·좌초경보 제공, 최적항로 안내, 기상정보 제공 등

### □ 정책효과

- ① (해양사고 피해감소) 안전제도·관리 개선을 통해 종전 4년간('13~'16) 대비 최근 4년간('17~'20) 사망·실종 등 인명피해 40% 감소(786→469명)<sup>참정</sup>
- ② (안전의식 고취) 여름철 해양안전체험장 운영(1만3천명 교육)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활동 필수교육을 제공하여 해양안전 국민의식 향상\*
  - \* 일반국민 해양안전수칙 준수도(1천명 설문, 100점) : ('18) 75.0점 → ('20) 83.4점(11%↑)
- ③ (디지털 해양안전관리) 바다 내비게이션, 어선 위치확인시스템 등 디지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, 독도·동해 영토주권 확립\*에 기여
  - \* 제2차 국제수로기구(IHO) 총회('20.11)에서 기존 해도표준(S-23, 일본해 표기)을 대체하는 디지털 해도표준(S-130,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해역 표기) 개발 결정 → S-100 기반 주도권 강화

## 5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적극 대응

### □ 추진실적

① (코로나 방역·업계지원) 승선진단검사,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(5개소) 등 항만 방역을 중점 추진하고, 해수욕장은 ICT 기반 방역관리\* 실시

\* 혼잡도 신호등(KT 등 협업), 사전 예약제, 한적한 해수욕장 적극 홍보 등

- 해양수산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운·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총 2.53조원 규모의 지원대책(총 8회)\*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

\* (해운) 총 4회, 1.7조원 규모(1조원 집행) / (수산) 총 4회, 0.83조원 규모(0.8조원 집행)

② (포스트 코로나 대비) 코로나19 이전부터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(‘19.11), 신산업 혁신전략(‘19.10) 등\*을 통해 해양수산업 혁신성장 추진

\* (분야별 전략) 아쿠아팜 4.0 추진방안(‘19.9),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(‘20.2) 등

- 범부처 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(‘20.7.14)”에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·그린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를 집중 반영

디지털 뉴딜	자율운항선박(R&D),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, 항만·어항 디지털 관리체계, 스마트 공동물류센터(항만 배후단지), 수출입물류 디지털 관리 플랫폼, 스마트 양식클러스터,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, 청정어장 등
그린 뉴딜	해수부 관공선 109척 친환경 전환, 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보조, 친환경 선박기술 R&D 및 제도개선, 갯벌 복원, 침적쓰레기 수거, 친환경 부표 보급, 해양생태축 설정·관리, CCUS 통합실증 및 상용화(R&D) 등

-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, 디지털·그린 전환,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\*

\* 해양수산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(‘20.7) 수립, 「항만법」 개정(‘20.12, 유턴기업 지원) 등

### □ 정책효과

① (코로나 방역·업계지원) 적극적인 항만 방역관리로 중단없는 수출입 해상물류를 실현하고, 해수욕장은 코로나 감염 제로 달성

-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영지원으로 해양수산업계의 긴급한 유동성 애로 해소, 1,500억원 이상 수산물 소비촉진 등 피해 최소화 기여

② (포스트 코로나 대비) 창업투자, R&D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디지털·그린·바이오 등 혁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창업·성장 촉진\*

\* 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으로 118개사 창업, 891억원 투자 유치, 4,818명 신규 고용 창출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혁신을 위한 기틀 마련

## II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추진 여건

#### □ 경기 대응 측면

- '21년 경제 회복이 전망되나, 코로나19 불확실성 존재
  - '20년 역성장( $\Delta 1.1\%$ )에서 벗어나, '21년 약 3.0% 성장(IMF·한은 등)이 전망되나,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
- 경기 반등 정책과 함께, 지역균형발전 및 안전망 구축 필요
  - 코로나 방역과 함께 내수(소비·투자) 및 수출 회복을 통한 확실한 경기 반등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 시급
  - 경기 부양 효과의 특정 지역·계층에 편중과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도 절실

#### □ 산업구조 전환 측면

- 탄소중립과 脫플라스틱을 위한 국가적 노력 요구
  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'50년 탄소중립(Net-Zero) 추진에 대해 세계 각국\*이 공감대 형성, 대응전략 수립 중으로, 우리도 동참 필요
  - \* (美) 바이든 정부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2조불 투자 / (EU) '50년 넷제로 목표로 그린딜 추진
  -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\*로 육상과 해양 환경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국가적 감축노력 요구
  - \* 전년 대비 택배 19.8%↑, 음식배달 75.1%↑ → 폐플라스틱 14.6%↑, 폐비닐 11%↑
- 선제적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좌우
  -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융합을 통해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,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·활용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 필요
  - 특히, 코로나19 계기 비대면·온라인 경제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체계 구축 가속화 시급

## 2 업무추진 방향

### □ 해양수산의 경기 뒷받침 역할 강화

- (해운)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반등 뒷받침을 위해 선적공간 제공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
  - 국적선사 혁신, 해양진흥공사 지원 확대 등 해운재건도 차질없이 이행
- (수산)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, 연근해 수산자원관리, 친환경 양식 육성 등으로 수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 가속화
  - 어촌·도서지역 정주여건 혁신, 항만재개발, 해양관광·문화 인프라 조기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소멸 예방

### □ 지속가능한 선도형 해양수산 실현

- (탄소중립·플라스틱 제로화) 해양수산 분야의 脫탄소화 및 탄소 흡수원 확보, 해수면·해수온 변동 등에 대한 적응력 향상 추진
  - 해양플라스틱 저감('22년까지 30%, '30년까지 50% 감축) 가속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(어구·부표, 하천유입)-수거-처리 시스템 혁신
- (디지털 전환·혁신산업 육성) 해운·항만, 수산·어촌, 해양안전 등 해양수산 쏠 분야를 최대한 신속하게 디지털 전환
  - 해양바이오·로봇 등 혁신산업 육성 및 유망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

### □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구축

- (코로나 방역·지원) 국가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여 해양수산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하고, 필요시 관련업계 경영안정 신속 지원
- (선박·수산물 안전) 어선·연안선박의 사고 저감, 수산물 생산·유통 단계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
- (선원·어업인 지원) 선원 근로·복지, 어업인 의료복지 지원 확대

☞ 해수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'21년 예산 6조 1,628억원을 바탕으로, 경기 반등 뒷받침과 해양수산 산업구조 전환 추진

### Ⅲ. 2021년 해양수산부 핵심 추진과제

#### 《 2021 비전 》

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향해, 해양수산부가 이끌겠습니다.  
**굳건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국 실현**

3대 분야, 5대 추진전략, 12대 핵심과제

#### 1. 경제를 뒷받침하는 해양수산

##### [1] 수출물류 지원 및 차질없는 해운재건

- ①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
- ② 해운재건 및 연관산업 혁신

##### [2] 수산업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

- ① 수산업 활력지속가능성 확보
- ② 어촌과 연안의 균형발전

#### 2. 지속가능한 선도형 해양수산

##### [3] 해양수산 탄소중립, 해양플라스틱 제로화

- ① 해양수산 탄소중립
- ②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
- ③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강화

##### [4]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, 혁신산업 성장 촉진

- ①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
- ② 혁신산업 육성 및 지원

#### 3. 안전하고 따뜻한 해양수산

##### [5]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

- ① 코로나19 방역지원
- ② 선박·수산물 안전관리
- ③ 선원·어업인 지원

# [1] 수출물류 지원, 차질없는 해운재건으로 경기 반등 뒷받침

## 1 개요

- (수출물류 지원)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반등 뒷받침을 위해 그간 해운재건 성과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지원 강화
- (해운재건 이행) 국적선사 선복 및 서비스 혁신,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, 해운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해운선진국 도약기반 마련

< 향후 해운재건 목표 ('20~'25년은 추정치 및 목표치) >

<구 분>	'19	'20	'21	'22	'25
해운 매출액(조원)	37	36	40	42	51
원양 선복량(TEU)	50만	78만	105만	113만	120만
지배선대(DWT)	8,535만	9,030만	9,430만	9,672만	10,004만

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 1. 수출기업 물류애로 신속 해소

#### 1] 선적공간 제공 임시선박 투입, 중소화주 지원, '컨' 박스 수급 확대

- (임시선박 투입) 수출물류 안정 시까지 주요 항로에 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매월 2척(약 8,000TEU) 이상\* 투입
  - \* (미주항로) HMM, SM상선 월 2척 이상(선사별 1척 이상) 투입, (동남아항로) 고려해운 월 1척 이상 투입, (유럽항로) HMM 1척 이상 투입
- 항만시설사용료 감면(최대 15%) 기간 연장(~'20.12 → ~'21.6), 주요항로 수출 인센티브\* 제공으로 국적·외국적 선사의 임시선박 투입 지원
  - \* '20.12~'21.2월 간 미주·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증가 시
- (중소화주 특별지원) 중소·중견화주에 임시선박 선적공간의 50%, 국적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(긴급 화물수요 항로)의 45% 우선 제공
  - 정기운항선박의 중소화주 전용물량(주당 350TEU) 지원기간도 연장\*
    - \* (당초) '20.11~12월 → (연장) ~'21.2월(필요시 추가 연장)
- ('컨' 박스 수급) 해운·무역협회 협업을 공(空) '컨' 박스 활용률 향상, 해진공의 '컨' 박스 장기 리스('21.3, 40피트 4.3만대 등)로 공급 안정화

## 2 장기운송계약 지원 중소화주 장기계약 지원 및 우수 선화주 지원 강화

- (중소화주 계약 지원) 중소화주연합체\* 구성·운영(중진공 지원) 등을 통해 장기운송계약 체결 시, 정시·긴급 선적, '퀵' 박스 등 우선 지원
  - \* 중소화주들의 소량 수출화물을 집적하여 국적선사 선적공간 공동구매, 운임 협상력 확보
- (우수 선화주 지원) 장기운송계약 활성화를 위해 우수 선화주 선정기준, 인센티브 등 지원요건 개선\* 추진
  - \* 장기운송계약 배점 확대, 매출액 및 국적선사 이용률 등 지원요건 완화 등

## 3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종합대응센터 운영 및 해운시장 질서 확립

- (종합대응센터) 관계기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\* 운영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모니터링 및 지원, 물류애로 접수·조치 등 추진
  - \* (참여) 해수부, 산업부, 중기부, 선주협회, HMM, 무역협회, 중진공, KOTRA (운영) '20.12~'21.2(필요시 연장) / 애로 등 접수(유선·누리집), 관계기관 실시간 협력·지원
- (해운시장 질서 확립) 선·화주 간 및 선사 간 부당한 공동행위 등 근절을 위한 '해운시장 질서 확립방안\*' 마련('21.上)·추진
  - \* 해운산업 특수성 및 「해운법」 규정(공동행위 인정), 他 국가 사례(美 연방해사위원회, 中 교통운수부, 日 국토교통성) 등을 고려, 심의위원회·전문조사기구 등 구성·운영방안 마련

## 2. 차질없는 해운재건 이행 및 인프라·연관산업 혁신

### 1 '퀵' 선사 경영혁신 HMM 글로벌 경쟁력 확보, K-얼라이언스 결성 지원

- (HMM) 1.6만 TEU급 초대형선 8척 투입('21.上), 신조선 추가 발주를 통해 컨테이너 선복량을 '25년 112만TEU까지 확대(現 71만TEU)
  - \* 관계기관산은, 해진공 등과 협의하여 중장기 선복량 확대를 위한 신조프로그램 등 지원방안 마련
- 선대 확충과 연계한 서비스향로 확대 추진(미 동안, 지중해 등),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물류시스템\* 도입('21~)을 통한 對 화주서비스 개선
  - \* 계약, 선박 운항일정 및 선적공간 등 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최적의 화물운송 관리체계 구축
- (K-얼라이언스) 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간 효율적 선대 운영, 과잉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적 협력모델인 'K-얼라이언스' 결성('21.上) 지원
  - 선대확충(선박금융), 필수 영업자산('퀵' 박스 등) 확보 등을 지원하여 K-얼라이언스의 안정적 운영 및 동남아항로에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

## 2 해진공 역할 강화 한국형 선주사 도입 및 보증지원 범위 확대

- **(한국형 선주사)** 선사의 선대 확보 및 용선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선박을 임대하는 **한국형 선주사 도입·육성**
  - 우선, 해진공에서 **운용리스(BBC)\*** 방식을 도입하고, 한국형 전문 선주사 육성을 위한 **중장기 전략 마련**(‘21.上)
  - \* 금융리스(BBC-HP, 기존 방식) :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의무 부여  
⇔ 운용리스(BBC) :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(선박 매입의무 없음)
- **(보증범위 확대)** 해운항만기업의 경영 안정, 장기운송계약 등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**신용보증, 계약이행보증 등\*** 신규 지원(‘21.上)
  - \* (해진공법 개정, ‘20.12) 기존 자산취득만 보증 → 신용대출, 계약입찰·이행 등에도 보증 허용

## 3 인프라 혁신 거점항만 개발·운영 효율화, 항만배후단지·해외거점 확충

- **(거점항만)** 제4차 항만기본계획(‘20.12)에 따라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은 예타 등 사전절차 이행(‘22년 기초조사 착수)
  - 부산항·인천항·광양항은 물류 효율화를 위해 **부두 증설 등\***을 가속화하고,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**운영 시스템도 혁신\*\***
    - \* (‘21.上 착공) 부산신항 서‘칸’ 피더(1선석), 인천신항 ‘칸’(3) / (지속추진) 광양항 석유화학(2)
    - \*\* (부산항·인천항)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(‘21.下) / (광양항) 2개사 운영체제 지원(시설 정비 등)
- **(항만배후단지)** 인천항 전자상거래·콜드체인 특화구역 활성화\* 및 특화구역 신규 지정(부산·목포항 등), 주요항만의 배후단지 확충\*\*
  - \* 인천항-공항 Sea&Air 연계, 공공 민간투자 확대 / \*\* 부산·광양·인천·평택항 436만㎡ 추가조성(‘21~)
- **(해외물류거점)** 동남아·유럽 주요항만\*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보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(현지사용료의 50~80%)
  - \* (동남아) 인니 프로볼링고항(‘21.3월 개장) / (유럽) 로테르담항·바르셀로나항(‘21.9월 개장)

## 4 연관산업 지원 항만공간 입주 지원(유턴기업), 발전전략 마련(항만연관산업)

- **(유턴기업)** 개정 「항만법」(‘20.12)에 따라, 유턴기업에 수출입 실적과 관계없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지원\*(‘21.上)
  - \* (현행) 매출액 中 수출입액 20%(제조업)·5%(서비스업) 이상 → (개선) 유턴기업 우선입주 지원
- **(항만연관산업)** 선박연료공급업, 선용품공급업, 항만용역업 등의 경쟁력 향상 및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한 **종합발전전략 마련**(‘21.上)

## [2] 수산·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 실현

### 1 개요

- (수산업 활력·성장) 온라인 중심의 대규모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, 수산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회복 기여 및 수산업 활력 제고
  - 연근해 수산자원관리, 친환경 양식 육성 등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
- (어촌·연안 균형발전) 수산공익직불제 시행, 어촌·어항 재생개발, 도서여객 지원 등으로 어촌정주여건 혁신 및 귀어·귀촌 활성화
  - 항만재개발, 해양관광·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

#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# 1. 수산업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

##### 1] 소비·수출 촉진 전방위 소비 촉진 및 수출 지원, 식품산업 육성 추진

- (소비 촉진) 수산물 상생할인(390억원)\* 등 온라인 중심의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2,500억원 이상 소비창출 및 어가경영 지원
  - \* (행사/할인율) 8회 이상(설·추석 특별전, 대한민국 동행세일,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) / 20% (사용처) 온라인 쇼핑몰, 전통시장, 대형마트, 생협, SSM 등(코로나 방역과 연계 추진)
-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 확대 (20개소), 「수산물 유통법」 개정 및 수산물 유통협회 설립 추진
- (수출 지원)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, K-씨푸드 전용관\*(5개, 주요국 온라인몰) 등 비대면 지원 확대로 25억불 이상 수산식품 수출 추진
  - \* (현행) 중국(타오바오) → (추가) 미국(아마존), 태국, 베트남, 아세안 거점국가
- 수산무역지원센터(7개국 10개소)의 통관애로 등 해소, 국적선사의 선적 지원 등 온·오프라인 연계 전방위 수출 지원
- (식품산업 육성)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(전남 착공, 부산 예타), 중·소규모 수산식품거점단지 2개소 추가 조성\* 등 인프라 확충
  - \* (~'20) 13개소 → ('21) 15개소(화성·태안 준공) → ('22) 19개소(화순·서천·해남·통영 준공)
- 간편기능식, 건강식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지원, 유망 중소·중견 수산식품기업에 성장·고도화 바우처(15개社, 年 각 1~2억원) 지원

## 2 연근해 자원관리 TAC 확대, 어선감척, 자원조성 등 수산자원관리 강화

\* AI옵서버, 전자어획보고시스템 등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과 연계 추진

- (TAC 확대) TAC(총허용어획량 제도) 대상 어종·업종 확대\* 및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(1·2차)을 지속 추진하고, TAC 관리기반도 강화\*\*
- \* (대상) 15개 어종(시범어종 3개 포함), 14개 업종 → 확대 추진
- \*\* (인력) TAC 조사원 95→120명 / (조사선) 13척 운용, 4척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(~26)
- (어선감척 등) 연근해어선 210척(근해 95, 연안 115) 감척,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시행('21.1, 14종) 관리, 민·관 협력 불법어업 단속 강화
- (자원조성) 바다목장 10개소, 산란·서식장 14개소 등 자원조성기반 확대
- (제도개선) TAC·어구 관리 및 상습·중대 불법어업 제재 강화를 위한 수산관계법령 개정, 어업갈등 해소를 위한 일부업종 조업구역 조정

## 3 친환경 양식 청정어장 재생, 배합사료 의무화, 부산물 재활용 등 추진

\* 친환경 부표 보급, 부표 저감·수거, 양식 스마트화 등과 연계 추진

- (청정어장) 과밀·노후화된 어장 4개소('21~'25년 간 총 20개소)를 침적 폐기물 수거, 어장 재배치·조정 등을 통해 청정어장으로 재생
- (배합사료) 친환경 배합사료 인증기준을 마련\*('21.上)하고, 배합사료 공급 인프라 확충\*\* 및 배합사료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
- \* 「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」 개정 / \*\* 배합사료 생산공장('21~'23, 생산능력 6천톤/년)
- (부산물 재활용) 굴패각을 재활용하는 발전소 탈황연료 생산시설 설치(~'22)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- (내수면어업) 친환경 양식단지(2개소), 유희저수지 자원화(2개소) 등 조성

## 2.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 실현

### 1 연안·어촌 정주여건 혁신 공익직불제 시행, 어촌재생, 도서여객 등 지원

- (공익직불제) 수산자원 보호, 친환경 생산 등 수산·어촌의 공익가치 향상, 어촌 유입·정착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(4종)\* 시행('21.3)
- \* ('21년 지원규모) 조건불리 19,300어가, 경영이양 300명, 자원보호 1천척, 친환경생산 627어가
- 젊은 어업인 유입을 위한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('21.3, 「수협법령」 개정) 등 제도개선, 공익직불제 최초 시행에 따른 면밀한 집행관리 실시

- **(어촌·어항 재생)** 어촌뉴딜 신규 6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 추진하고, 기존 190개소는 조기 착공·준공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
  - 어촌·어항의 재생·개발 촉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전략\* 수립('21.下)
  - \* 어촌·어항재생개발계획, 국가어항 통합개발계획,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등
- **(도서지역 지원)** 국가보조항로·준공영제 항로(총 42개)의 공공성 제고 및 소외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지원\*, 독도·무인도서 관리 강화 추진
  - \* 여객선·도선 미운항, 연육교 미개통 73개 도서에 보조항로 지정 및 지자체 지원 추진
- **(지원기반 고도화)** 수산·어촌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수산업어촌공단 설립(어촌어항공단 확대·개편) 및 어촌정보 종합포털 구축('21.12)

## 2 **항만재개발 활성화 부산 북항 등 재개발, 공공성·사업성 확보 제도개선**

- **(사업 실행)** 부산 북항 1단계는 '22년 준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\*, 인천 영종도는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추진
  - \* 기반시설 공정률 95% 달성, 해양문화·관광콘텐츠 확보(부산항기념관·해양레포츠텐터 등)
- **광양 묘도, 거제 고현항\***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, 부산 북항 2단계('22. 착공) 등 신규 사업은 절차 간소화, 사업자 선정 등 실행력 확보
  - \* (묘도) 에너지허브(LNG-태양광 열병합 발전시설 등) 조성 / (고현) 상부시설 건설(1·2단계 부지) 등
- **(제도개선)**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(역사성·친환경성 등)과 사업성(국비지원 확대, 행정절차 축소)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## 3 **해양관광·문화인프라 구축 치유·생태·레저·어촌관광 및 문화 인프라 확충**

- **(치유·생태관광)**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조성\* 및 해양치유 콘텐츠·프로그램 개발\*\*, 관련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해양치유관리단 출범
  - \* 완도(~'21), 태안·울진·경남고성(~'23) / \*\* 다부처 해양·산림·농촌 치유기술개발('21~'25)
- **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타, 서남해안 갯벌·습지의 국제인증\*** 추진
  - \* (서남해안 갯벌)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/ (고창·서천군)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
- **(레저·어촌관광)** 5대 권역 해양레저관광거점\*, 어촌테마마을 10개소\*\* 및 가족형 어촌체험관광지 4개소('21, 시범사업) 조성 추진
  - \* 시흥·군산·보성·서귀포·강원고성 / \*\* 기추진 7개소(영광·완도·고흥·경주 등) + 신규 3개소(공모)
- **(해양문화)** 국립 인천해양박물관, 미래해양과학관(청주) 조성 추진(~'25)
  - \* 국립해양박물관(부산), 국립해양생물자원관(서천), 국립해양과학관(울진) 기 운영 중

### [3] 해양수산 탄소중립(Net-Zero)·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

## 1 개요

- (탄소중립) 선박·항만의 단계적 脫탄소화, 해양분야 탄소흡수원(CCS·갯벌·바다숲) 개발·확충, 차세대 해양에너지 기술 상용화 추진
  - 해양분야 기후변화(해수면·해수온 상승 등)에 대한 관측·예측 고도화, 연안·항만과 해양수산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추진
- (플라스틱 제로화) 해양(어구·부표)·육상(하천유입) 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, 수거·처리·재활용 시스템, 민·관 거버넌스 등 관리체계 전반 혁신
- (국제협력) P4G 정상회의(21.5) 등 계기 해양수산 脫탄소·플라스틱 협력

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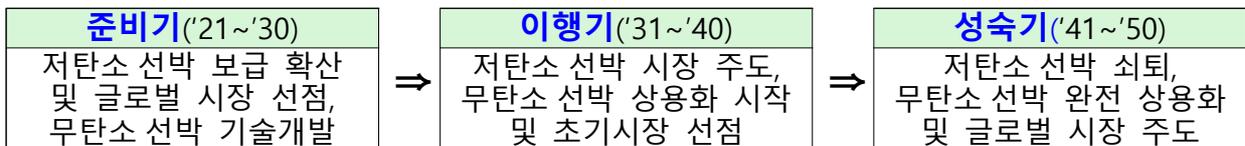
### 1. 해양수산 탄소중립 기반 구축

#### 1 선박·항만 탈탄소화 저탄소 선박 보급 및 무탄소 기술개발, 항만 친환경화

- (친환경 선박) '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\*를 위해 기술개발·보급 및 국제표준화 추진(산업부 협업)

\* (저탄소 선박) LNG, 하이브리드 등 → (무탄소 선박) 수소, 암모니아 등

《 선박 무탄소화 추진 로드맵 ('20.12, 2030 그린쉽-K 추진전략) 》



- (보급 촉진) 관공선 15척, 민간선박 16척(외항선 13척, 내항선 3척)\*을 저탄소 선박으로 건조, 공공부문 건조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

\* (30년 목표) 관공선 388척(199척 건조, 189척 DPF 장착), 민간선박 140척(건조) 친환경 전환 (민간 지원) 친환경선박 보조금(10~20%), 해진공 보증 지원 및 뉴딜펀드 연계지원 검토

- (기술·인프라 개발)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\*(~'25), 무탄소 선박기술 신규 개발\*\* 예타 및 LNG병커링 전용선 개발·건조(~'22, 2척) 추진

\* LNG·암모니아 혼합연료, 전기복합어선 등 / \*\* 수소·암모니아 핵심기술, 시험기반, 시범선 등

- (인증·표준화) 국가인증제도(지원 연계), 국제표준화 추진단(산·학·연) 운영

- **(친환경 항만)**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\* 하고, 무탄소 항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('21.12)

\* (울산) 신규 벙커링 터미널 건설('20~'24) / (부산) 지역과 협의하여 민자유치 추진 (광양·인천·평택 등) LNG 인수기지 시설 보완 추진(~'30)

- 선박연료유 **황합유량** 기준 적용(외+내항선) · 저유황유 유류세 지원 (보조 65% + 감면 15%) 강화,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확대(YT+TC·SC 등) 추진

## 2 탄소흡수원 개발 확충 CCS 적지·기술 확보, 블루카본(갯벌·바다숲) 확대

- **(CCS)** 대규모 실증·상용화를 위한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, CO<sub>2</sub> 누출 대비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제도적 기반 보완('21~'23)

- **(블루카본\*)** 갯벌 복원지역을 확대(기존 6개소, 추가 3개소)하여 '25년까지 4.5km<sup>2</sup> 복원, 바다숲도 2,386ha 추가 조성(누적 약 2.6만ha)

\* 갯벌 및 해양생태계(잘피 등)가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

- 블루카본의 체계적·종합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('21.下)

## 3 청정에너지 개발 조류·파력·온도차발전, 해양바이오수소 기술 상용화

- **(해양에너지)** 조류·파력·해수온도차 등 해양에너지 상용화·고도화 기술개발 및 실증\*, 해양에너지 발전 로드맵 수립('21.9)

\* (조류) 100kW급 발전플랜트 개발 및 도서전력 공급(전남), 실패역 시험장(부산·진도) 조성(~'22)  
(파력) 방파제 연계 30kW급 발전플랜트 개발 및 시험운영('21, 제주)  
(해수온도차) 1MW급 국외 실증을 위한 키리바시 육상실험기반 구축('21~'22)

- **(해양바이오수소)** 해양미생물 활용 수소 생산플랜트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수소정제(50→99.8%), 공정제어 및 운영최적화 시스템 개발('21~'23)

## 4 기후변화 관측·예측 해양·극지 분야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역량 강화

- **(해양)** 조사선·인공위성·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하여 분야별(해수면·해수온·연안침식·수산자원·해양생태계 등) 관측 및 정보제공 강화

- 빅데이터 기반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\*, 중장기 시나리오 전망 고도화

\* 해양기후변화 지수모델 개발, 북서태평양 해양-대기 상호작용 연구,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, 해양생태계 변동성 규명 및 예측모델 개발, 연안침식 예측모델 개발 등

- **(극지)** 환경변화(빙권·온도 등) 및 기후변화 영향 연구 확대, 극지역량 강화를 위한 「극지활동법」 제정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(예타) 추진

## 5.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연안·항만 정비, 수산업·해양생태계 관리 강화

- **(연안·항만)** 66개 연안 취약지구 정비(국가 19개, 지자체 47개), 연안재해 위험평가\* 시행('21.2) 및 취약지구에 대한 국가정비 사업기준 개선
  - \* 연안지역의 배후 취약성, 재해가능성 등을 조사·평가하고, 취약지구 저감대책 마련
  - 기후재해 대비 항만시설 설계기준\* 및 정비계획의 재해대응력 강화
    - \* (현행) 50년 빈도 재해대응 → (개선) 100년 빈도 재해대응, 신뢰성 설계법 도입 등
- **(수산업)** 고수온 내성어종 개발, 재해취약 양식장 재배치 및 재해 대응장비 보급\*, 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\*\* 및 입식신고율 제고 추진
  - \* (재배치) 경남권 연안어장(21) 등, (장비) 액화산소공급기 등 / \*\* 보급형 상품(가입금액↓) 개발 등
- **(해양생태계)** 해양생태축\* 설정·관리, 해양생물종복원센터\*\* 설립 추진
  - \* 기후변화관찰축, 연안습지보전축 등 5개 / \*\* 멸종위기 해양생물 증식·복원 등

## 2.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시스템 확립

### 1. 발생원 저감 해양기인(어구·부표)·육상기인(하천유입) 쓰레기 발생 저감

- **(해양기인 쓰레기)** 친환경 부표(스티로폼 부표 대체) 571만개, 친환경 어구(생분해성) 400척 등 보급 촉진\* 및 단계적 사용 의무화\*\* 추진
  - \* 보조금 지급, 성능개선, 어업인 의견수렴·홍보 강화 / \*\* 「수산업법」·「어장관리법령」 개정
  - 어업인의 어구·부표 회수 확대를 위해, 어구·부표 보증금제, 어구 실명제\*·일제회수제 법제화\*\* 및 항·포구 집하장 확충(50→80개소)
    - \* 전자어구관리시스템 개발(~'22년)과 연계 추진 / \*\*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·「수산업법」 개정
  - 어구·부표 사용 저감 등을 위해, 어구·부표 감축어법\* 보급 및 바이오플라스틱 어구·부표 개발 추진(다부처 脫플라스틱 R&D 예타)
    - \* 개체굴 양식(고부가가치·소량 생산→부표 감축), 현수교 방식(대형부표 활용→소형부표 감축) 등
- **(육상기인 쓰레기)**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하천관리청(환경부·지자체·공공기관)의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조치\* 실행 협조
  - \* (평시) 하구둑 등(낙동강·금강·영산강), 본류·앞바다(한강) / (여름철) 지류·지천 등 집중 차단·수거
  - 환경부·수협 등 협조를 통해 1회용품 등에 플라스틱 사용 규제\*를 확대·강화하고, 수산물 친환경 포장기술 개발('21~'24) 신규 추진
    - \* 플라스틱 1회용품 금지(비닐봉지·포장재 등), 생활제품(화장품·의약품 등)에 미세플라스틱 금지

## 2 수거·처리·재활용 강화 수거 인프라 확대·스마트화 및 처리·재활용 촉진

- (수거 확대)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7척 건조 완료, 침적쓰레기 수거 확대(年 3~4천 → 6천톤) 및 바다환경지킴이(年 1천명) 활동 지원
  - 드론 활용,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해양쓰레기 분포도 수립, 해안쓰레기·미세플라스틱 수거장비 개발 등 수거체계 스마트화
- (처리·재활용 촉진) 해양쓰레기의 염분 등을 제거하는 前처리시설 2개소 확충(~'22, 환경부), 해양쓰레기 에너지화 시스템 개발(~'24)
  - 폐부표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압축기 보급(現 27대 + 매년 2대), 생산자책임 재활용(품목·의무율↑, 환경부 협조) 및 업사이클링 확대

## 3 민·관 거버넌스 확립 국민참여 확대 및 범부처 협력시스템 구축

- (국민참여) 해양쓰레기 신고앱 운영 개시, 반려 해변·바다문화제 등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의 전국 확산 지원(참여플랫폼 구축 등)
  - 전국 4대 권역에 해양환경 이동교실 운영(권역별 차량 1대), 온라인 해양환경교육 플랫폼 구축,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범국민 캠페인 추진
- (부처협력)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, 해양쓰레기 국제논의 대응 등을 위한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치·운영(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 개정)

## 3.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강화

### 1 P4G 정상회의 친환경 선박, 해양쓰레기 글로벌 협력(외교부 협조)

- (친환경 선박) 탄소배출제로연대\*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해운분야 탄소중립 선도 메시지 전달, 친환경 선박 보급 확산 공감대 형성
  - \* '30년 무탄소 선박의 상업적 항행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(우리부·HMM·대조양·KOMSA 등 가입)
- (해양쓰레기) 유엔환경계획(UNEP)과 함께 해양쓰레기 국제협약 수립 이니셔티브 확보, 민관협력 파트너십 증진 등 추진

### 2 국제기구·ODA 탈탄소·플라스틱 관련 국제기구 및 ODA 협력 강화

- (국제기구) IMO(친환경 선박), NOWPAP·COBSEA(해양쓰레기) 등 논의 주도
- (ODA) 신남방국가\* 중심으로 해양 온실가스 감축, 해양쓰레기 등 협력
  - \*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, 해양쓰레기 처리 필요성이 높아 ODA 등 협력 강화 필요

## [4]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혁신산업 성장 촉진

### 1 개요

- **(디지털 전환)** 해운·항만, 수산·어촌 소 분야의 디지털·비대면 전환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효율성 향상,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화
  - 스마트 해상안전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로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,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공·민간 활용 활성화
- **(혁신산업 육성)** 해양바이오, 해양로봇·장비·모빌리티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, 유망 벤처기업·신기술에 전주기 창업투자·R&D 지원 강화

#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# 1. 디지털 융합 기반의 해양수산업 전면 혁신

##### 1 **해운·항만 자율운항선박, 스마트항만 및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**

- **(자율운항선박)** 자율운항기술, 육상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, 시뮬레이션 및 실해역 실증 등 상용화 기반 마련(~'25, 산업부 공동)
  - \* ('21) 시뮬레이션 → ('22) 소형시험선 → ('24~'25) 실해역 실선 테스트
-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스마트항만 연계기술 개발, IMO 규범화 주도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로드맵 마련('21.6)
- **(스마트항만)** 한국형 '퀵' 자동하역시스템(~'23) 및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하역시스템('21~'27) 개발, 광양항 항만자동화 Test-Bed 예타 추진
  - 29개 무역항의 디지털 시설물 관리 추진전략(ISP) 수립, 5G 기반 지능형 항만 기술개발·실증,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교육 실시(200명)
- **(스마트물류)** 인천항·부산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\* 조성 추진, 부산항 블록체인 플랫폼('퀵' 반출입 배차시스템 등) 고도화 및 인천항에 도입
  - \* (인천항) 설계·착공('21) → 완공('23) / (부산항) 기본계획 수립('21) → 설계·공사('22~'24)
- 공공·민간 수출입 물류데이터의 통합관리·공유 디지털 플랫폼 구축, 냉장·냉동 '퀵' 원격제어 장비·솔루션 지원 및 스마트 '퀵' 개발('21~'24)

## 2 수산·어촌 생산, 유통, 가공, 어촌 쉼 분야의 디지털·스마트 전환

- (스마트양식)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개소 및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2개소\* 조성 추진, 중소 양식어가에 스마트시설 보급(年 10개소)
  - \* (클러스터) 기추진 3개소(부산·고성·신안) + 신규 2개소 / (내수면) 기추진 1개소(괴산) + 신규 1개소
- 스마트양식 표준화전략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(~'22) 추진
- (스마트어업관리) 연근해 AI 읍서버 개발·시범운영(80척), 전자어획 보고시스템 운영 확대\*, 육-해-공 불법어업 통합감시체계\*\* 구축(~'22)
  - \* (현행) 선망, 안강망, 저인망 등에 시범운영 → (확대) 타 업종에 운영 확대
  - \*\* (해상) V-Pass, VMS 통신망 등 - (육상) 항포구 CCTV, 드론 - (항공) 중형무인기
- 원양 참치연승어선에 전자모니터링시스템(EM) 시범운영(세계자연기금 WWF 협조)
- (스마트유통·가공) 스마트 신선유통 표준화 R&D\*(~'21~'25), AI 기반 콜드체인(산지-소비지) 구축전략 및 온라인 거래지원 포털\*\* ISP 수립
  - \* 신선유통 표준지표, 위판장 3.0 표준모델 등 / \*\* 온라인 주문·배송·고객·재고관리 솔루션 제공
- 수산식품 스마트가공 R&D\*(~'21~'25) 및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고도화
  - \* 수산식품 가공 핵심공정 자동화, 스마트 품질검사 및 공정제어 시스템 등 개발
- (스마트어촌·어항) ICT 기반 비대면 의료돌봄서비스 등 스마트 어촌 시범사업(1개소, 과기부 협업) 및 어촌 스마트화 추진방안 수립
- 도서지역 국가어항(3개소, 동·서·남해)에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(~'21~'23)

## 3 해상안전·빅데이터 바다내비 운영 개시, 항법 고도화,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
- (스마트해상안전) 충돌·접촉예방, 최적항로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 게이션(e-Nav) 서비스\*를 개시하고, 원격 선박검사 제도화\*\* 추진
  - \* 3톤 이상 선박 5,950척에 단말기 보급, 3톤 미만 어선에 전용 앱 등 개발·배포 병행
  - \*\* '20년 임시시행 성과분석, 제도 재설계(용역)를 거쳐 법제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
- 항법정보(GPS·PNT) 정확도 개선 및 차세대 지상파항법시스템(eLoran) 시범운용(서해북부),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신규개발(다부처 예타) 추진
- (빅데이터 플랫폼) 분야별 해양수산 공공데이터(770종) 수집·연계\*로 AI 분석·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해양공간지도 구축(~'22)
  - \* 공공데이터 수집·연계 계획 : ('18~'20) 405종 → ('21) 200종 → ('22) 165종

## 2. 해양바이오 등 혁신산업 육성 및 지원시스템 강화

### 1 해양바이오 유용 소재 정보제공·발굴, 인프라 확충 및 전문교육 확대

- (소재정보·발굴) 해양수산생명자원소재 4천여 종의 효능 정보 등을 고도화\*하여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산업·연구계에 제공('21~'25)  
\* 항암, 항바이러스, 항산화, 항균 등 소재별 효능 정보를 기초로 등급화
  - 해양수산생명자원 기반 항바이러스 대응소재(20종) 발굴, 해양바이러스 DB(500종) 구축 및 제어기술 개발('21~'26) 추진
- (인프라·교육)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(~'23, 서천), 해조류 바이오소재 대량생산시설(~'23, 완도) 등 인프라 확충
  - 전문인력 교육(年 2회), 식품용 인허가·실험설계 컨설팅(식약처 협업) 지원

### 2 해양로봇·모빌리티 해양로봇·장비 등 개발·활용 지원 및 로드맵 수립

- (해양로봇·장비) 수중건설로봇 상용화를 위한 특수건설기계 등록 추진(국토부 협조), 극한지 무인이동로봇 시스템 개발('21~'25, 과기·산업부 공동)
  - 업계 국산화 수요가 높은 핵심 장비·기술\*의 국산화 개발 지원('21~'26, 13종), 드론 등 무인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
    - \* 자동조타장치, 레이더, LNG탱크, 시뮬레이터, 자이로컴퍼스 등
- (해양모빌리티) 공중·수상·수중에서 이용가능한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첨단해양교통(AOM) 로드맵 수립('21.下)

### 3 창업·투자·R&D 지원 유망기업 발굴·육성·투자 전주기 지원 강화

- (발굴) 창업 콘테스트, 리빙랩 R&D 기획\*, 도전형 R&D(O-ARPA)\*\* 등을 통해 디지털·비대면·신산업 창업아이템 및 유망기업 적극 발굴  
\* 최종 사용자(산업계·국민)가 기획 참여 / \*\* 現 기술로 극복이 어려운 과제 등 대상
- (육성) 창업 엑셀러레이터 및 스케일업 지원, 창업투자지원센터(6개소)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
- (투자) 해양·수산모태펀드\*, 클라우드펀딩 유치 지원,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사업화 투자지원 확대  
\* ('20년 누적) 총 2,623억원(17개 자펀드) → ('21년 신규) 393억원(3개 자펀드) 추가

## [5]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

### 1 개 요

- (코로나 방역·지원) 항만·선원, 해수욕장 등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하고, 필요시 해양수산업계에 경영자금, 적극행정 등 신속 지원
- (선박·수산물 안전) 선박사고 취약선박 집중관리, 어선·연안선박의 사고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장비보급, 선박 현대화 등 집중 추진
  - 수산물 생산·유통 쉼 주기에 걸쳐 수산생물질병·항생제·방사능(생산단계), 원산지·이력제(유통단계) 등의 위생안전 관리체계 개편
- (선원·어업인 지원) 선원 근로·복지체계 개선, 어업인 의료복지 지원

###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#### 1.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업계지원

##### 1] 방역 관리 항만·선원, 해수욕장 등 분야별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

- (항만·선원) 항만방역 관계기관\* 협력 강화(핫라인 개설 등), 방역관리 기반의 원활한 선원교대\*\* 및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(5개소) 지원
  - \* 해수부(지방해수청), 질병관리청(검역소), 관세청(세관), 법무부(출입국관리소), 항만공사 등
  - \*\* 선원 격리면제 대상선종 보완(기항없이 항해한 여객선·화물선 등, 질병관리청 협조) 등
- (해수욕장) 혼잡도 신호등, 사전예약제 등 방역시스템·매뉴얼 보완, 한적한 해수욕장 홍보 강화로 2년 연속 감염 제로 해수욕장 실현
- (기타시설)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\*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, 교육·홍보·전시·검사 등의 비대면·온라인화 지속 확대
  - \* 유통·물류시설(도매시장·위판장 등), 문화·교육시설(해양박물관·연수원 등), 관광시설 등

##### 2] 업계 지원 해양수산업계 경영안정 지원, 재정집행·적극행정 신속 추진

- (경영지원) 해양수산업계의 시장·경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긴급경영자금, 정책금융, 사용료 감면(국·공유시설) 등 적시 지원
- (재정집행·적극행정) '21년 예산(본부·지방청·공공기관)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, 국민·관련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도 과감하게 추진

## 2. 선박 안전 및 수산물 위생안전 시스템 혁신

### 1. **선박 안전** 선박·통항로 검사, 어선·연안선박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

- **(선박·통항로 검사)** 사고이력 등이 있는 취약선박 800척(어선 450척, 연안선박 350척) 집중 안전점검\*, 부선은 공사용 시설물 안전검사 등 실시  
\* (어선) KOMSA 지정검사원(1인 3척) 관리·지원 / (연안선박) 선박 검사주기 강화(2→1년) 등
  - 해상교통안전진단(해양개발행위)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, 통항로 안전성 평가대상 항만도 확대(무역항+연안항)
- **(어선사고 예방)** 화재경보·조난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및 화재경보·소화통합장비 개발('21.上), 원거리 어선 위치발신기 보급('21~'23, 2천대)
  -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의 항해당직 이행 제도·홍보 강화, 조타실 시야 확대가 가능한 어선장비통합 기술개발(~'22, 통신·항해·조업) 추진
  - 안전·복지형 연근해어선 표준선형 보급·확대\*,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위한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및 진흥단지 구축(연구용역) 추진  
\* (현행) 근해 3개(권현망·쌍끌이·선망) → (확대) 근해 21개+연안업종(5종) 표준선형 개발
- **(연안선박 안전)** 연안여객선은 운항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(KOMSA 상황실, 도서 CCTV)하고, 선사부담 완화(10~20→10%)로 현대화펀드 활성화
  - 연안화물선은 부실 사업자(무실적 등) 제로화를 위한 등록취소제 시행 및 노후선박 감축을 위한 교체연령 등 개선방안 마련('21.下)
- **(안전문화 확산)** 해양안전체험관('21.3, 안산)·국민해양안전관('21.7, 진도) 개관 등 안전교육·홍보 확대, 선사 안전투자 공시제 단계적 도입 추진

### 2. **수산물 위생안전** 생산(질병·위해요소)·유통(원산지·이력 등) 단계별 관리 강화

- **(생산단계)** 수산질병관리 강화를 위해 검·방역 업무를 일원화\*('21.3~) 하고, 주요 생산해역에 하수처리시설 확충(1→11개소\*\*, 환경부 협조)  
\* 수산과학원·수산물품질관리원 관련업무 통합·일원화 / \*\* '25년까지 71개소 확충 추진
  - 양식장 안전성 조사(年 14.5→15천건)·HACCP 등록(267→300개소) 확대, PLS\* 도입 대비 잔류물질 실태조사('21~'24)로 위해요소 관리 강화  
\* 허용물질목록관리 : 사용허가물질(약품 등)은 잔류허용기준, 그 외 물질은 일률기준 관리

-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·남해 해역 등의 방사성물질 조사\*, 주요 수산물의 생산단계 방사능 안전검사\*\*를 철저히 실시(필요시 확대)
  - \* 주요 조사정점의 조사주기 단축(年 4→6회) 등 / \*\* 다소비 어종 40개 등 2,400건 실시
- (유통단계) 수입량과 소비자 민감도 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, 유통이력 의무신고대상도 확대\*
  - \* (원산지) 10대 품목(명태·가리비·참돔·방어 등) 집중단속 / (유통이력) 의무신고대상 17→25개
- 명예감시원(800명, 소비자단체 등) 활성화, 신고포상금 상향 등 원산지 국민감시를 강화하고, 원산지 판별기술·장비 신규 개발\*(~'23) 추진
  - \* 유전자·이화학분석 등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기술(11개 품종), 휴대용 키트(20개 품종) 개발
- 청정위판장, 노후위판장 저온유통시설 지원, 산지거점유통센터(FPC) 등 친환경 유통시설 조성 확대 추진(18→21개소)

### 3. 선원 및 어업인 근로·복지 지원 강화

#### 1 선원 근로·복지 어선원 관리 일원화, 선원 복지제도·인프라 개선

- (어선원 관리) 어선원 안전·근로 향상을 위해, 이원화<sup>20톤이상 20톤미만</sup>(해수부·고용부)된 관리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 추진(선주·선원단체 협의 → 선원법 개정)
  - 외국인 어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송출·입 관리제도 개선\* 시행 추진
    - \* 송출·입 전담기관(공공기관) 선정, 주요 송출국 합의(인니 등 MOU), 근로감독 강화 등
- (선원 복지) 직무외 부상·질병에 대한 상병보상액 상향(최저임금 이상, 선원법 개정) 및 장해어선원 의료재활급여 법정화(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)
  - 선원복지회관(26→27개소)·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(6→7개소) 확충 및 원양선원 원격의료지원 확대(100→120척), 선원 유급휴가제 개선 추진

#### 2 어업인 복지 어업인 연금·재해보험 및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

- (보험 지원)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확대\*(인원·금액) 시행, 어선재해보험료 환급 확대(무사고 환급 도입, 휴향·휴어 환급 확대) 추진
  - \* (국민연금) 지원인원 13,053 → 13,319명 / 월 최대 지원금액 43,650 → 45,000원
- (의료 지원) 낙도·낙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(年 755→830명)·어업인 안전쉼터(68→73개소) 확대,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도입 추진(법령 개정)

## IV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5대 추진전략	'21년 주요 핵심과제 추진계획
<p>① 수출물류 지원, 차질 없는 해운재건 추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요항로에 국적선사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·중견기업에 선적공간 우선 제공, 중소화주연합체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및 우수선화주 제도 개선 추진</li> <li>▶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및 '해운 공정거래 질서 확립방안' 마련</li> <li>▶ 1.6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투입 및 'K-얼라이언스' 결성 지원, 운용리스(BBC) 방식의 '한국형 선주사' 도입 및 해진공 신용보증 등 신규 지원</li> <li>▶ 부산신항 등 거점항 부두 증설, 항만배후단지 확충,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보</li> <li>▶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지원 및 '항만연관산업 종합발전전략' 마련</li> </ul>
<p>② 수산·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(총 390억원),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「수산물 유통법」 개정, 수산식품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및 K-씨푸드 전용관 구축·운영</li> <li>▶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(전남·부산) 및 중소규모 수산식품거점단지(2개소) 추가 조성</li> <li>▶ TAC 관리대상 어종·업종 확대, 연근해어선 210척 감척 및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 시행, 과밀·노후어장의 청정어장 재생(4개소) 및 친환경 배합사료 인증기준 마련</li> <li>▶ 수산공익직불제 시행, 어촌뉴딜 신규 60개소 착수 및 기존 190개소 조기 추진, 「어촌재생 특별법」 제정 및 '한국수산어촌공단' 설립 추진</li> <li>▶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및 가족형 어촌체험관광지(4개소) 등 해양레저·문화 인프라 조성</li> </ul>
<p>③ 해양수산 탄소중립, 플라스틱 제로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친환경 선박 공공·민간 보급 촉진, 기술·인프라 개발, 국가인증제 및 표준화 추진, 무탄소 항만구현 중장기 전략 수립, 저유황유 유류세 지원 확대</li> <li>▶ CCS 상용화를 위한 해양저장소 확보, 갯벌 복원(9개소), 바다숲 추가 조성(2,386ha), 해양에너지 발전 로드맵 수립, 해양바이오수소 시스템 개발, 「극지활동법」 제정 추진</li> <li>▶ 66개 연안 취약지구 정비, 재해취약 양식장 재배치 및 재해대응장비 보급, 양식장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재난복구비 현실화 추진</li> <li>▶ 친환경 부표(571만개)·어구(400척) 보급, 어구·부표 보증금제, 어구실명제/일제회수제 법제화,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지원,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(반려해변 등) 전국 확산</li> <li>▶ 탈탄소·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(P4G)-국제기구(IMO 등) 및 ODA 협력 강화</li> </ul>
<p>④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, 혁신산업 성장 촉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범부처 규제혁신로드맵 수립, 한국형 '칸' 하역시스템 개발,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(부산·인천), 블록체인 플랫폼 고도화</li> <li>▶ 스마트양식 클러스터(5개소) 및 내수면 스마트양식장(2개소) 조성 추진, 연근해 AI 옵서버 개발, 스마트 신선유통 표준화 기술개발(~25), 불법어업 육·해·공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</li> <li>▶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시, 해양수산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해양공간지도 구축</li> <li>▶ 해양생명자원 조사·확보 범위 확대,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및 해조류 바이오소재 대량생산시설 확충, 첨단 해양교통 로드맵 수립</li> <li>▶ 창업콘테스트, 도전형 R&amp;D, 창업엑셀러레이터·스케일업 지원, 해양수산펀드 지원</li> </ul>
<p>⑤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코로나19 대응 항만방역 관계기관 협력 강화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(5개소) 운영 및 지원,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및 사전예약제 등 방역시스템 고도화</li> <li>▶ 사고이력 선박 집중 점검(800척), 어선 화재경보·조난발신장치 의무화 및 위치발신기 보급, 연안여객선 운항상황 실시간 모니터링, 해양안전체험관 준공(안산·진도)</li> <li>▶ 수산질병관리 검·방역 일원화, 주요 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, 해양환경/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안전검사, 원산지 단속 및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 확대</li> <li>▶ 어선원 안전·근로 감독업무 일원화, 선원 직무외 부상·질병 상병보상액 상향, 장애어선원 의료재활급여 법정화,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및 소형어선 어선재해보험 환급 확대</li> </ul>

《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》

- 화장품 스타트업의 청년 대표인 20대 A씨는 '17년 창업 이후 미국, 영국, 독일 등 50개국에化妆품을 수출하며 차세대 수출리더로 발돋움하고 있다. '20년 하반기 미주노선 운임 급등 및 화물수출 수요증가로 인해, A씨는 미국에 수출할 화물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 바이어와 추가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었다. 이 상황에서 국적선사 HMM은 해수부-중기부 간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정기운항선박과 임시선박의 중소수출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A씨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였다. 정부와 HMM의 수출물류 지원으로 A씨는 수출화물을 예정대로 선적하고, 해외 바이어와 추가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.
- 충남 보령에서 근해안강망업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50대 B씨는 '19년까지는 어업소득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, '20년부터는 어업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세제혜택이 작았었지만, 농어업 형평성을 위해 「소득세법」이 개정되어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이다. B씨는 “줄어든 세 부담이 어려운 어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충북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'20년 8월 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전남지역의 해수욕장을 갈 계획을 세웠었지만,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. 바로 자신과 같은 여행객이 많이 몰려들어 오히려 해수욕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. 다행히 정부가 통신사와 함께 운영하는 '혼잡신호등'을 통해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었고, 전라남도의 '사전예약제'를 활용하여 다른 여행객과 거리를 두고, 발열검사 등을 거쳐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었다. C씨는 해수욕장에서 끊임 없이 들려주던 '2미터 사랑' 노래를 요즘도 흥얼거리곤 한다.

《 '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》

- '삼시세끼'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만재도 주민들은 그동안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여객선을 타고 만재도 근처까지 와서 바다에서 작은 배(종선)로 옮겨 타야만 했다. '어촌뉴딜' 사업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이 개선되면서 이제 만재도 주민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위험하게 배를 갈아타지 않고도 바로 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. 그동안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5시간 40분이 걸렸던 뱃길은 접안시설 개선 후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되면서 일일생활권이 되었다. 여객선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종선을 대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40대 어촌계장 D씨는 “내 생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”며 기뻐했다.
- 평소 수산물 반찬을 즐겨먹는 유치원생 아이를 둔 서울거주 40대 엄마 E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'수산물 상생활인'과 '수산공익직불제'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. 공익직불제를 지원받는 어업인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상생활인을 통해 20%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앞으로 공익직불제가 적용되는 수산물도 확대된다고 하니, E씨는 맛 좋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을 아이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안심이 된다.